社 說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선결과제

—— 북한의 NPT 탈퇴선언 파장을 보며

핵확산금지조약(이하 핵금조약)은 핵무기보유국이 비보유국으로 핵무기와 핵생산기술을 이전, 확산되는 것을 막는 약속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은 이 조약을 68년에 채택한 후, 오는 95년까지 시한부 발효시켰다. 1백54개국이 가입했는데, 가입국 모두는 핵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 조약의 탈퇴를 지난 12일에 선언했다. 즉, 핵이나 핵의 주변조건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미국과 정면대결 양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안보리에 보내는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핵전쟁예행연습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해, '비핵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과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이기에, 조약 제 10조 1항의 '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조성'되어 탈퇴의사를 밝혔다.

이 선언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대화단절을 선언한 전례를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스스로 민족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봐야 한다. 우리 나라도 북한의 핵금탈퇴선언후 전쟁대비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5차례가 넘는 특별사찰압력을 받기만 하다가는 안되겠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탈퇴후 부딪칠 국제사회의 보복이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면, 이 보복이 실상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어 자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실리라는 판단이다.

이후 미국은 지난 17일 북한과 참사급 접촉을 가졌고, 북한은 다시, 지난 19일에 '팀스피리트 훈련영구 중지'와 '남한 내 미국 핵기지 완전 공개'를 조건으로 탈퇴철회를 시사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가 핵공격, 방어훈련임을 암시하며, 탈퇴철회선언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봐야 할 것은 한반도 내의 비핵화다. 한쪽은 핵전쟁대비연습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핵제조조건을 조금이라도 갖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울대에 얹혀 놓을 수 없다. 이것은 북한의 탈퇴선언 철회를 위해서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숨은 입장이리란 생각이 든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핵문제가 올바로 관철되기 위해서라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과제다. 그 다음은 북한과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정의'를 새로 생각해야 한다.

강화된 조직으로 학생운동 주도하길

—— 전총련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학생운동이 새모습으로 커다란 변화를 하기 위한 움트림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20일 본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전국 대학의 총학생장들이 모여 '93 전대협 총회 및 전총련 건준위 중앙위원회'를 가졌다.

지난 6년간의 전대협의 활동을 점검하고 전총련(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설을 위한 총노선 논의, 임시의장 선출 등 전총련 출범을 위한 바쁜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국의 1백87개대학의 학생대표자들인 총학생회장들의 협의체로 유지해온 전대협은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이 이미 전대협조직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 새로운 결집체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내온것이 전총련이다. 이는 전대협이 출범할때부터 바라던 —각지역, 부문을 총괄하는— 모습이기도 할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대의원으로 참여하던 총학생회장뿐 아니라 각 대학 단대학생장들도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태동한 전대협은 격동의 80년대 만큼이나 지난했던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안정국의 칼날과 탄압속에서도 6월항쟁부터, 통일문제를 전국민적 문제로 확산시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와 가깝게는 91년 강경대열사 치사사건과 5월투쟁, 지난해 대통령선거까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여정을 그치지 않았다.

특히, 운동의 대중화라는 과제를 내걸고 분임토의, 과·단대학생회 강화등에 주력한 것들은 학생회의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매년 전대협 출범식에 집결한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조직력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대협의 전총련으로의 한단계 높은 발전에는 —이번 총회의 총노선에서도 나타나지만— 새로운 질적·양적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삶의 현장인 학원과 국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여전히 중요시되는 학우대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대장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결집체로써 그들의 생활과 요구에 기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밖에도 논의의 대중성 확보와 부문운동의 활성화등도 더욱 요청될 것이다. 이것들은 전총련에서 제기하듯이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의 전국적 건설이 가장 적절한 명제가 될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많은 사람이 침체에 빠져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리고 대사면등의 가시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출범하게될 전총련이 담당해야 할 과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지금이야말로 전총련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운동, 대안세력으로 한차원 높은 발돋움할 때이다.

신문 매체비평

홍미유발 위주 과장보도 지양해야

이번주에는 다른 사건이 파묻힐 만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탈퇴 선언이 각 일간지의 지면에 큰 무게로 실렸다. 남북관계가 이인모씨 송환문제와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예기치 않은 조약 탈퇴선언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우선 북한의 이번 조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단위는 남한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다.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조약 탈퇴가 담은 뜻을 거꾸로 짚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강행과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압력을 받아오던 북한이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결과론적으로 서방세계에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이다. 미·영·러등 핵보유국의 주도로 지난 70년 조약이 발효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기존 핵무기보유국 이외에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제조및 취득 금지조항(조약 1,2조)이 빈익빈 부익부의 핵무기 독점화를 보장했다는 지적을 다시 국제사회에 여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강대국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이유가 되겠다.

또 이번 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금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었던 팀스피리트 훈련과 국제원자력기구와 관련해 미국을 협상자리로 이끌어 내는 것도 북한이 '자충수'를 던지게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여하튼 북한을 상대해야 할 세력으로서 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또하나의 주제가 되었을 남한 정부는 이번에는 오히려 외국의 경제·군사적 제제를 만류하는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이번 일로 괴상적으로나마 새 정부의 통일정책의 가닥을 잡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극화와 파편화로 일컬어지는 현대언론의 단면을 보여주듯 이런 한참 꼬인 매듭을 푸는 언론의 방법은 오히려 간단했다. 외신들을 받아서는 '북한, 준전시상태 돌입', '북, 둥화관제 훈련'등 누가 들어도 흑할 만한 제목으로 처리했다.

정보홍수시대에 수용자들이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매체가 공정한 정보와 해석을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홍미위주로 보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지 못할 경우 이는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며 그릇된 여론을 만들 뿐이다. 북한의 조약 탈퇴 이유나 '핵확산금지조약이란…'등에 대한 해석이 없다면 수용자의 이해는 '돌발적이며 엉뚱한 것'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에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이 재단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는 진행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틀이라 생각한다.

여하튼 앞으로 나올 언론의 후속타를 지켜볼 일이다.

〈신문방송학과·신문연구부〉

'효율'이 낳은 고각살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조치에 대해

시론

지역주민 공공재정수요 증가될듯
지자제 정착위해 재원확보 시급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정권의 정통성과 국민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얼마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금융실명제 실시 시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들은 공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당연한 사실로 인정했지만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섰다. 사실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6공 당시에도 심지어부 논란이 일다가 잠적하고 말았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실시한다고 해놓고서 며칠 후 그 사실을 번복하고 말았다. 그 명분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증권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실시시기를 당분간 유보했다. 개혁이 오히려 퇴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신경제1백일계획'의 틀을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단기경제활성화방안, 중소기업활성화, 경제행정규제완화, 예산절감방안, 금융제도 개선, 물가안정 등 11개 과제를 6월말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제중 대부분은 6공에서도 실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어느 정도 과거 정부와 차별화시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실이 중요한 관건이다. 11개 과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경제행정규제완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게다. 연일 각 분야의 규제완화 내용이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다.

11개 과제중 대부분은 경제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연금이 되고 있어 차치해 두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절감방안에 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산이 비효율적으로 쪄여 왔다는 지적이 제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절감 기준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사실상 매우 효율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귀결로 보여질 수 있다.

2년전 기초 및 광역의회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고 피어 났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예견되고 있다. 30여년만에 다시 지자제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된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기능을 이양시키는 등 지방분권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자질시비가 잇따르고 중앙당의 거수기 노릇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 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아직 연륜이 얼마되지 않고 과거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자제가 정착되면 앞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증대와 주민선호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교육, 보건, 주택 등 사회 개발부문에 대한 복지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지방정부의 역할증대는 재정규모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지립도는 약60%정도(지방세가 약40%, 지방세외수입이 약20%)로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85%에 육박하고 있고 도의 경우에는 45%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의 균등한 분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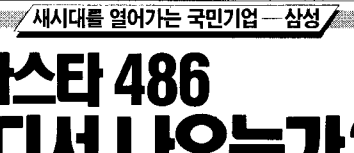
중앙정부에게 바란다. 중앙정부의 예산절감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여태까지 팽창예산으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보더라도 긴축예산은 그 대안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도 합치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효율성의 제고를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교각살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란다. 날로 높아 가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재산과세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전화세·주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제의 근간을 이루는데 노력해야 한다.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선출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홍 현 승

〈대학원 석사4기·경제학〉

고 황 만 평



전총련도 그리할 것입니다!!
깡깡
깡깡
깡깡